



조간 제 8007 호 대표 전화 062-370-7000

#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음력 11월 28일)

## ‘광주전남특별시’에 막강 권한…수조원 재정지원 담아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들여다보니

300여개 특례 조항…광주정신·전라도 정체성 등 포함  
시·군·구 기초단체 현행 유지…불이익 배제 원칙 명시  
반도체·AI 사업, 예타조사 면제…통합특별교부금 혜택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초광역 자치정부의 구체적 설계가 담긴 특별법 초안이 공개됐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통합 이후 적용될 행정·재정·권한 체계를 법으로 정리해 중앙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안정적 재정 지원까지 포괄한 것이 특징이다. ▶관련기사 2·5면

1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총 8면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재정·산업·에너지·공공기관 이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약 300개의 특례를 담았다.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초광역 자치정부 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우선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고, 관할 구역을 하나로 묶은 단일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명시했다. 특히 제1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 전라도 1000년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별시는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도록 규정됐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도록 명시해, 단순 통합이 아닌 중앙 권한과 제도를 함께 바꾸는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행정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특별시 청사는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고, 광주와 전남의 시·군·구 행정단위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행정통합으로 기존에 누리던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 원칙’을 법에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권한 이양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광주전남특별시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핵심 기능을 제외한 중앙정부 사무를 단계적으로 특별시에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조정하며,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도 위원회에 참여해 통합 이후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

특별시는 사실상 규제 완화 지역으로 설정됐다. 중앙정부는 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우선 정비하고, 특별시는 자체 조례를 통해 규제 등록과 공표, 신설과 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도록 하는 절차도 담겼다.

공직사회의 안정성 확보 방안도 구체화됐다. 통합 이전 광주와 전남 소속 공무원 은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고, 기존에 임용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종전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통합 과정에서 조직 확대나 인력 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불이익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재정 특례는 이번 법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통합 이후 특별시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통합경제지원금’을 신설하고, 국제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기존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통합 전 광주시와 전남도가 받던 보통교부세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2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교부금과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별도로 뒤 일반 교부세나 교육재정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행정통합과 연계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행정통합’, 19일부터 시도민 의견 듣는다

이달 말까지 27개 시군구 공청회 개최…공론화 작업 돌입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시도는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군·구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19일 동구를 시작으로 22

일 서구, 23일 광산구, 27일 북구, 28일 남구 순서로 열린다.

전남은 19일 영암군에서 첫 공청회가 열리며 이어 20일 장성군, 21일 목포시와 신안군, 무안군에서 개최된다. 다음 지역 일정은 다음 주 조율을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시도는 공청회에서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 필요성, 경과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눈다.

시도는 온라인 플랫폼, 추진협의체 등을 만들어 속의,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 시

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통합 논의의 과정과 향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호남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플랫폼을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감대 형성의 중심 창구로 운영하고, 앞으로 열릴 주민설명회에서도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김윤덕 “12·29 여객기 참사 사과…진상 밝힐 것”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특위서 국내 항공안전 전반 개선 약속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공식 사과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항공안전 체계 전반의 개선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9·10면  
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항공안전에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사

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유가족과 국민께 명백한 진상을 밝히고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국정조사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공항시설 개선, 조류충돌 예방, 항공사 안전역량 강화, 정부 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혁신안전망’을 수립해 이행 중”이라며 “방위각

시설 규정 미준수와 구조물 문제가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방위각 시설 5개소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조류충돌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한 전국 공항의 조류충돌 예방 인력을 확충하고, 전 공항에 조류레이더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조류 유인시설 관리 강화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조류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사고 원인 조사와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가 동시



15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식 사과하고 있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에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와 감사, 국정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자료 제출과 설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건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